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회견담회

Press conference on Yoon Seok-yeol government's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2024년 3월 14일 오후 2시 30분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혈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21조넷이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현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총 16개 단체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시간표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시간	개요	세부내용
14:30~14:35	기자간담회 개최 및 행사 소개	
14:35~14:40	영상 상영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영상
14:40~15:45	발표	1. 언론의 자유
		2. 집회·시위의 자유
		3.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5. 공공정보 접근 및 알 권리
15:45~16:00	질의응답	플로어 토론
16:00	기자간담회 폐회	

*참고) 외신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CONTENTS

언론의 자유

발표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6

집회·시위의 자유

발표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14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발표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28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발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37

공공정보 접근·알 권리

발표 김조은(정보공개센터 활동가)

43

**윤석열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규탄 기자간담회
분야별 의제 발표**

Reports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n the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I. 언론의 자유 탄압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1. 시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KBS 박민 신임 사장의 취임 이후 공영방송의 제작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 공중의 알 권리 또한 대폭 축소되고 있다.

2022년 KBS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서는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에는 교섭대표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박민 KBS 신임 사장은 취임하면서 KBS 메인뉴스 <뉴스9>의 앵커를 교체하고,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KBS에서는 최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제작해 4월 18일에 방영 예정이던 다큐멘터리 제작이 무산됐다. 명백한 공영방송의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다.



한국방송광고공사(KBS) 사장 박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모습(사진=KBS)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공영방송 KBS를 비롯해 MBC, EBS 이사 교체가 예정돼 있다. KBS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MBC 등 다른 공영방송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국정없는기자회(RSF)가 지적한 것처럼 MBC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인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제작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제작자율성 침해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대통령실은 시민과 기자에 대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4년 2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풍자 영상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을, 경찰은 제작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인데도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9월 검찰은 2021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윤석열 후보에게 검사 재직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언론사(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직접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언론사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 기자의 자택 뿐 아니라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방송사 또한 압수수색 당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관저 공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 개입 의혹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PD들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해 압수수색 등에 기자·PD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타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강제수사와 처벌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규약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를 내세운 국가 검열을 중단하라!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정의도 모호한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대통령 풍자 영상조차 ‘가짜뉴스’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전쟁의 사령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최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보도를 모두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심의에 나서자 내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특정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으라고 독려했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사퇴 요구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곳 또한 유례없는 규모의 심의와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first lady에 존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 야당의 입장만을 전한다는 이유,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단위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을 위한 정치 심의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짜뉴스’ 금지 법안에 반대했던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도리어 의회를 우회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를 통해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 제재하고, 인터넷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의 기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허위 표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를 막기 위해 영국의 IMPRESS와 같은 언론인과 독자 간 협의를 거치는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I. Press Freedom Suppression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 human rights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1. Guarantee the autonomy of public broadcasting

The autonomy of public broadcasting has been seriously violated since the new KBS director-general Park Min, appointed by the Yoon Seok-yul government, took office. The public's right to information has also been severely curtailed.

The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KBS workers and management in 2022 states that "those in charge of programming, production, and reporting must fully respect the opinions of practitioners and make decisions based on reasonable procedures and methods." They are required to consult with the bargaining union before reorganizing programs and to notify the bargaining union in the case of emergency programming. However, since taking office, the director-general of KBS, Park Min, has replaced the presenter of KBS's main news program, <News 9>, and unilaterally canceled the current affairs program, <The Live>. A documentary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was due to be broadcast on 18 April, was canceled by KBS for the inexplicable reason that it could influence the recent general election.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creative

autonomy of public broadcasting.



since taking office, the director-general of KBS, Park Min, has replaced the presenter of KBS's main news program, <News 9>, and unilaterally canceled the current affairs program, <The Live>.

The Yoon government's control of the media is achieved through 'issuing personnel'. In 2024, the public broadcasters KBS, MBC, and EBS board will be replaced. There is great concern that what happened to KBS will happen to MBC and other public broadcasters. In particular, as Reporters Without Borders has pointed out, MBC has been in conflict with the government over its report on Yoon's hot mic remarks, raising concerns about future infringements on its creative autonomy. The Yoon government must stop violating the creative autonomy of the media and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2. The presidential office must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freedom for citizens and journalists!

In February 2024, the presidential office declared a satirical video of the president apologizing to the people to be "fake new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blocked

access to the video and police raided the creator's home. Despite the video's obvious satire of the president, police are investigating it for election law violations and defamation of the president. In September 2023, prosecutors raided an independent internet media outlet (Newstapa) that had raised allegations of corruption against candidate Yoon Seok-yeol during the 2021 presidential election, when he was a prosecutor. The president himself accused Newstapa of defamation under the criminal cod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did not stop at Newstapa. Not only were the homes of Newstapa's journalists raided, but so were those of broadcasters who had quoted Newstapa's stories. (Other station managers and journalists face criminal charges for reporting critical of the government, including allegations of civilian involvement in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prosecutors raided an independent internet media outlet (Newstapa) that had raised allegations of corruption against candidate Yoon Seok-yeol during the 2021 presidential election, when he was a prosecut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s recommend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riminalize defamation. Furthermore, the forced investigation and attempted punishment for defaming the President violate international covenant standards guaranteeing freedom of the press.

3. The KCSC must stop government censorship under the guise of ‘fake news’!

In 2024, Yoon's government is waging a war against "fake news", a term that has a vague definition.

Any report that raises questions is considered 'fake news,' and even a satirical video of the president is considered 'fake news.' The commander of this war i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Until recently, the KCSC, whose members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sanctioned all reports that raised suspicion and criticism of the president. The move to review internet media reports, which were previously not subject to KCSC scrutiny, met with strong resistance from internal staff, with Chairperson Ryu Hee-Lim even encouraging his family and friends to file complaints against certain reports. He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for violating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Public Officials' Duties, and internal staff have called for his resignation.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ssion under the KCSC is currently reviewing news broadcasts related to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is also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sanctions on an unprecedented scale. Severe sanctions have been imposed on a weekly basis for failing to mention the President's First Lady in current affairs dialogue programmes, presenting only the views of the opposition, and critically examining the President's proposed policies. The Election Broadcasting Review Commission, which is supposed to balance press freedom and accountability, has become a politically biased vetting body for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he current government and ruling party, which opposed a bill to ban 'fake news'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bypassed parliament and used administrative bodies such a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the KCSC to label media reports as 'fake news,' impose sanctions without legal basis and block information on the Internet. Yun's plan to crack down on 'fake news' should be scrappe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pply standard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hate speech is dealt with firmly, not punished. It should als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such as IMPRESS in the UK, that consult with journalists and audiences to prevent political deliberations by the KCSC.

II. 집회시위의 자유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 개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집회는 금지되거나 제한 통보되고 있다.¹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집회시위 금지(제한)통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악과 현장에서 경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집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경찰 소환이나 기소로 벌금이나 구금의 징벌에 놓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현장에서도 경찰은 참여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되어 통행을 막고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을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법원의 세 차례 판례에 의거해도 폭력이 없는 한 해산명령 할 수 없음에도 해산명령을 하고,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또한 과도하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사람 한명당 경찰 5~8명이 사지를 들어 끌어내

1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1096926.htm

는 일이 많다. 모욕적일 뿐 아니라 시민이 다치기도 했다.²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장애인의 시위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이후 경찰의 폭력 행사가 컸다.³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참가자의 사지를 들어끌어내고 있다. 특히 여성 참가자를 남성경찰이 끌어내면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2023.7.7. (사진출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침해감시단)



전주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고 있다. 2024.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2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의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적인 연행방식은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낼 때도 동일하게 쓰였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도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 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차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한 이후 장애인혐오발언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집회시위의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노인특별보고관 등이 정치인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활동가와 변호사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소환을 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⁴ 이러한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에 대해 2023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⁵에서도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및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근거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제한, 서울 지하철 장애인활동가의 시위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개입 및 제재 우려하며 11조 및 12조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했다.

2. 집시법 금지(제한) 통보와 집시법 시행령 개악

한국에서 집회시위는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⁶나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도 20여 년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6년 보고서에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우려했다.⁷ 특히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19시기부터 매우 후퇴해 집회금지통보나 제한 통보가 많아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비판적인 집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집시법」 상 집회 금지장소가 아닌데도 교통소통으로 이유로 집회제한이나 금지통보를 내린다.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집회시위의 시간이나 장소 선택의 자유가 있고, 2009년 야간 집회 헌법불합치 판결⁸과 2014년 야간시위 한정위헌 판결⁹로 야간집회가 보장됨에도 윤석열 정부와

4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30항에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려면 언론인, 인권옹호자, 선거감시자, 기타 집회의 감시 또는 보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규약상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5 한국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5

6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반하게 운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1 September 2008, A/HRC/8/52

7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 2016.6. 17. A/HRC/32/36/Add.2

8 2009년 9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8헌가 25결정)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제10조(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1명중 5명은 위헌, 2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서다. 헌법불합치판결이 나면 헌법에 위배되나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뜻이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주간(낮)에 개인적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 주최 및 참가를 어렵게 해 집회의 자유를 명목상의 것으로 만들고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과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여러 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집시법 제10조처럼 광범위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다. 제10조의 집회 허용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집시법 제10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 2014년 헌법재판소((2014. 3. 27결정 2010헌가2)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는 광범위하고,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면서, 집시법 10조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여당은 이를 개악하려고 했다. 국회 의석수 때문에 「집시법」을 개악하지 못하자 2023년 7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집시법」 11조에 있는 금지장소는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 대해 금지 통보했다. 그러나 술한 법원의 판결로 계속 좌절되자 정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도로를 주요도로로 넣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악하였다. 또한 개악된 「집시법」 시행령 14조 제1항은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 횡수를 줄이는 등 소음기준 위반의 범위를 확대해 집회시위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집회 시위에 대한 일반논평37호에도 나왔듯이, “(집회시위는 그) 속성에 의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는 수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¹⁰

3. 노동자의 야간노숙집회 금지와 경찰의 폭력적인 해산과 형사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집회가 소음과 도로점거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발언한 이후 경찰은 야간 노숙집회와 출퇴근 집회를 금지통보하거나 경찰의 물리력을 써서 강제적으로 해산시켰다. 당시 대통령은 집회 통제와 관련해 경찰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면책을 뜻하는 발언을 했고, 그 후 경찰의 폭력적 강제해산은 잦아졌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불법과 폭력’의 개념 확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거리가 멀다.¹¹ 단순한 밀치기와 차량 혹은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다.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관련 대법원 판결(제조업 파견은 불법판결) 이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한국지엠 비정규직도 소송을 걸어 재판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3년이나 계류 중이어서 3년째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를 이어왔다. 그동안 경찰의 제재 없이 평화롭게 진행하였으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인 5월 24일 한국지엠비정규직 노숙문화제가 막혔고, 5월 25일 열린 금속노조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화제도 경찰이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다쳤고 3명이 연행됐다.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문화제는 신고의 의무가 없음에도 「집시법」 11조의 대법원 앞 100미터 금지 조항을 근거로 문화제를 탄압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현존하는 위협이 없으면 미신고집회

10 일반논평37호 47항

11 자유권 일반논평 37호의 15항에도 적혔듯이 폭력의 개념을 분명하다. “단순히 누르기나 밀치기, 차량 혹은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상적 활동은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국의 국가권력은 폭력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며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나 금지통보된 집회라 할지라도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는 2011년, 2012년, 2021년 대법원 판례¹²가 있음에도 폭력적으로 집회참가 인원의 수배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강제해산시켰다. 이후 6월 9일 대법원 앞 집회도 강제해산했으며, 7월 7일 청계광장 근처 집회도 강제해산시켰다. 경찰이 참가자들의 사지를 들어 집회장소에서 끌어내는 등 폭력이 심각했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에 대해 노동자들은 국가배상소송을 걸었다.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야간집회에 대한 금지나 제한통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4. 장애인들의 지하철 선전전 금지와 폭력적 해산과 형사처벌

2021년 12월 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는 출근길 아침 지하철 타기 등의 선전전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장애인노동권 등을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렸다. 2022년도 예산의 경우,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계의 요구안의 0.8%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을 민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3대 폭력 단체라고 낙인찍었으며, 지하철은 단 5분도 늦추게 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고, 사지를 들기도 하며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2023년 1월 2일 등 수차례 출근길 지하철타기 운동을 하던 장애인을 방해하기 위해 무정차 통과하기까지 했다. 이에 2023년 2월 15일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긴급진정을 했고 특별보고관들은 4월 23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¹³ 이에 2023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시위를 막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체포 조사를 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의 강경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하자, 서울교통공사 보안직원들이 「철도안전법」이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이라며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는 참가자들조차 10분 만에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어내 해산시켰다. 경찰도 아닌,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는 신분인 보안직원들이 폭력을

12 경찰의 이런 직접해산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 2012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9. 선고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1년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13 2023.4.26.인권이사회 결의서 50/17, 44/10, 43/4, 43/16, 51/4에 근거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별보고관,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 한국정부에 장애인시위와 관련해 서한을 보냈다.

행사할 정도로 집회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에는 무려 8명이나 되는 장애인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심지어는 취재하는 기자나 영상활동가들도 끌어내기도 했다.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 중에 다친 장애인활동가가 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이었는데도, 경찰은 해당 장애인활동가를 병원에서 강제로 끌어내 유치장으로 옮기는 등의 치료방해행위도 자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맞서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의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다. (사진출처= 전장연)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형숙 전장연 대표를 저녁에 경찰이 와서 강제로 경찰서에 구금시키겠다고 왔다. 2024.3.11. (사진출처 = 전장연)

5. 퀴어축제 금지 등 광장 사용에 대한 제한과 혐오 표현에 대한 방지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성소수자들의 집회도 금지했다. 2023년 5월 7년간 서울광장에서 이어왔던 퀴어축제를 서울시는 애매한 이유로 불허했다. 또한 2023년 11월 18일 열리기로 한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근처가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소수자들의 집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2020년 자유권 일반논평37호에도 어긋나는 조치다.

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해 극우세력들이 혐오세력들이 혐오발언을 하며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집회나 여성집회에 대해 극우세력이나 유튜버들이 방해해도 경찰은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다. 「집시법」 3조의 집회방해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경찰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24항¹⁴에도 반대시위자들의 폭력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하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14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24항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비국가 주체가 참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폭행, 예를 들어 일반 대중, 24) 반대 시위자 및 민간 보안서비스 제공업자들에 의한 간섭이나 폭력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II.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Korea Disability Forum

1. Overview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not subject to permission, rallie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or restricted based on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particular, unde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violations of the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have led to (1) the prohibition(restriction) notice to assemblies (2)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include the area around the presidential residence in the 'main road of a major city(Art.12 (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3) forcible dispersal with physical force, and (4) restrictions on the assembl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emporary workers. These suppressions lead to police investigation, prosecution, fine, and detention.

Even at peaceful assemblies, the police have been mobilized in far greater numbers than the participants, blocking traffic and intimidating them. In particular, police violence at assemblies has been deteriorating.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ree times that the police cannot

order a dispersal unless there is physical/actual violence, the police use excessive force during the dispersal proc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five to eight police officers repress one participant by dragging them out, even if the person is unarmed. It is not only humiliating but also injurious¹. Police brutality was especially high after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made negative comments about the protes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².



Several police officers pull a participant's arms and legs to disperse an assembly. In particular, male police officers dragged female participants away, causing sexual discomfort due to physical contact. (7.7.2023, BARAM Human Rights monitoring team)

- 1 The police's violent method of dragging participants to assemblies/protests by holding their arms and legs was also used by the presidential guard to remove people who wanted to express opposing opinions to the president. Even a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was officially participating in an event was dragged out by his limbs just because he had said something 'bad' to the president Yoon.
- 2 Hate speech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d after Lee Joon-seok, the former head of the People Power Party, spoke negatively about the subway-taking campaigns by the SADD. In response,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impact of politicians' statements on society.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28003> <https://twitter.com/cvoule/status/1674001590921961475>



National Assembly member Kang Sung-hee of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was dragged by presidential guards during the event celebrating the elevated status of Jeollabuk-do, on 18 January 2024. (Presidential Office Photo Press team)

In additi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lawyers who monitor violent abuses by the police have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summoned by the police³. In November 202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lso recommended the repeal or amendment of Articles 11 and 12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restrict assemblies near the presidential residence, as well as excessive physical intervention and sanctions against assemblies by disability rights defenders in Seoul subway stations, in response to concerns about these rights violations.

2.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nforcement Decree

In South Korea, assemblies and associations can take place just after the notification to the police. However, the actual operation is a permission system.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³ The General Comment no.37 of the ICCPR(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a. 30: "States parties must ensure independent and transparent oversight of all bodies involved with peaceful assemblies, including through timely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including judicial remedies, or t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with a view to upholding the right before, during and after an assembly."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raised concerns and recommended improvements on this issue for more than 20 years, but nothing has chang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re have been many notices of bans or restrictions on assemblies, and it has gotten worse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after the Pandemic. Even in non-prohibited places for assemblies, they are restricted or banned for 'traffic reasons'. Many times, assemblies can take place after administrative lawsuits.

In particular, the Yoo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tried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people have the freedom to choose the time and place of their assembly.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Assembly Act, assemblies should not be banned out of 100 meters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but the police banned these assemblie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government then bypassed the measures by amending the decree to make the road near the presidential residence in Yongsan a 'main road' to control assemblies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Article 1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mbly Act was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noise standard violations by shortening the start of the measurement and reducing the maximum noise level⁴.

3. Prohibition of laborers' overnight assemblies and violent dispersal by police

After President Yoon stated in a cabinet meeting on 23 May that the assembli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caused inconvenience to citizens due to noise and roadblocks, police issued bans on assemblies in the community and night time and forcibly dispersed them using force. Violent dispersals became more frequent after the then-president said he would promote the police impunity regarding protests and assemblies. The use of force by police is an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an expansion of the concepts of 'illegal' and 'violence' which is far from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⁵.

After the 2010 court ruling that dispatching manufacturing workers was illegal, many subcontracted workers filed a lawsuit. The temporary workers in 'GM Korea' also filed a lawsuit and had been in

4 As stated i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7 of 2020, assembly demonstrations "may entail by their very nature a certain level of disruption to ordinary life, such disruptions must be accommodated."

5 ICCPR General Comment 37, para. 15.

their sit-in protest for 3 years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since the case was pending. One of the campaigns was a ‘culture festival’ at night time and it had been held peacefully without any police sanction, but after the president's words, the police suddenly banned the culture festival on 24 May 2023 and violently dispersed it on 25 May 2023.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workers were injured and three people were detained.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Assembly Act, the culture festival is not the object of notification but the police repressed it based on the 100-metre ban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Article 11 of the Act. The police also violently dispersed the festival with police officers several tim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despit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1, 2012, and 2021 stating that even unnotified or prohibited assemblies cannot be forcibly dispersed unless there is an existing danger. The assembly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on 9 June was also forcibly dispersed, as was one near Cheonggyecheon Square on 7 July. The violence was severe, with police grabbing participants by the limbs and dragging them from the place. The workers filed a lawsuit for state compensa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ir freedom of assembly.

In addition, there were a series of bans and restrictions on workers' nighttime assemblies.

4. Violent dispersa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bway-taking campaigns

Since 3 December 2021,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 a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 has been campaigning on the subway in the morning, calling o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to secure a budget for disability rights such as the right to mobility, deinstitutionalization, and right to work. However, in the 2022 budget, only 0.8 percent of the demanded disability rights budget was reflected.

The Yoon administration stigmatized SADD as a ‘violent group’ and said that the subway could not be delayed even for five minutes. Seoul Metro and the police pulled activists with disabilities in wheelchairs out of their wheelchairs, lifted their limbs, and violat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physical freedom, and freedom of mobility. In response, on 15 February 2023, SADD submitted an urgent appeal to the Special Rapporteurs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embly, and human rights defenders. The Special Rapporteurs sent a letter of concern to the Korean government in April. In November 202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government's excessive use of force including arrests, investigations, and fines to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ir assembly and expression.

Since the government showed its hostility against the SADD, Seoul Metro claimed that the SADD violated the Railroad Safety Act. In this regard, Seoul Metro dragged the activists who were in their silent protest out of the subway platform within 10 minutes without any legal basis or authority to do so. On 15 December 2023, as many as eight disabled activists and citizens were detained. Seoul Metro even dragged away journalists and video activists covering the assembly.

Against the Seoul Metro and the police, the SADD is continuing its response activities, including filing a civil/state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Seoul Metro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Even recently, an activist with disability got injured during the forcible removal by the police and was treated at a hospital, and the police even tried to take her to a detention centre during the treatment.



police officers, far outnumbering the subway-taking campaign participants, block access to the assembly point(Photo by SADD)



While the injured Lee Hyung-sook, the victim of violent suppression by the police, was being treated at the hospital, the police came to forcibly detain her at the police station. 11 March 2024. (Photo by SADD)

5. Restrictions on the use of public spaces for a queer festival and neglect of hate speech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also banned LGBT festivals. In May 2023,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anned a queer festival that had been held at Seoul Plaza for seven years for vague reasons, and issued a partial ban on a transgender memorial rally scheduled to be held on 18 November 2023 because the area near the presidential office is a "main road". This is contrary to the 2020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which calls for efforts to ensure the right to assembly for minorities.

On the other hand, when hate groups shout hate speech and disrup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Japan, and when far-right groups and YouTubers disrupt workers' or women's associations, the police do nothing. Despite Article 3 of the Assembly Act prohibiting the disruption of assembly, the police have been passive. According to the General Comment 37, para. 24, the State must protect participants "s interference or violence by other members of the public, counterdemonstrators, and private security providers."

III. 문화예술 검열

블랙리스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2022년 6월 12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계 인사들(송강호, 박찬욱 등)을 만나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이념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을 검열, 사찰, 배제, 차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카툰-윤석열차> 검열 사건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과 배제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예산 삭감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기관들이 확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및 국가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윤석열 정부 문화예술 검열의 특성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1. 윤석열정부의 배타적인 이념 정책 강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검열 심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이념 정책과 지향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념 전쟁과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월 1회 이상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광복절 경축사),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등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부적절한 이념적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과 혐오 그리고 검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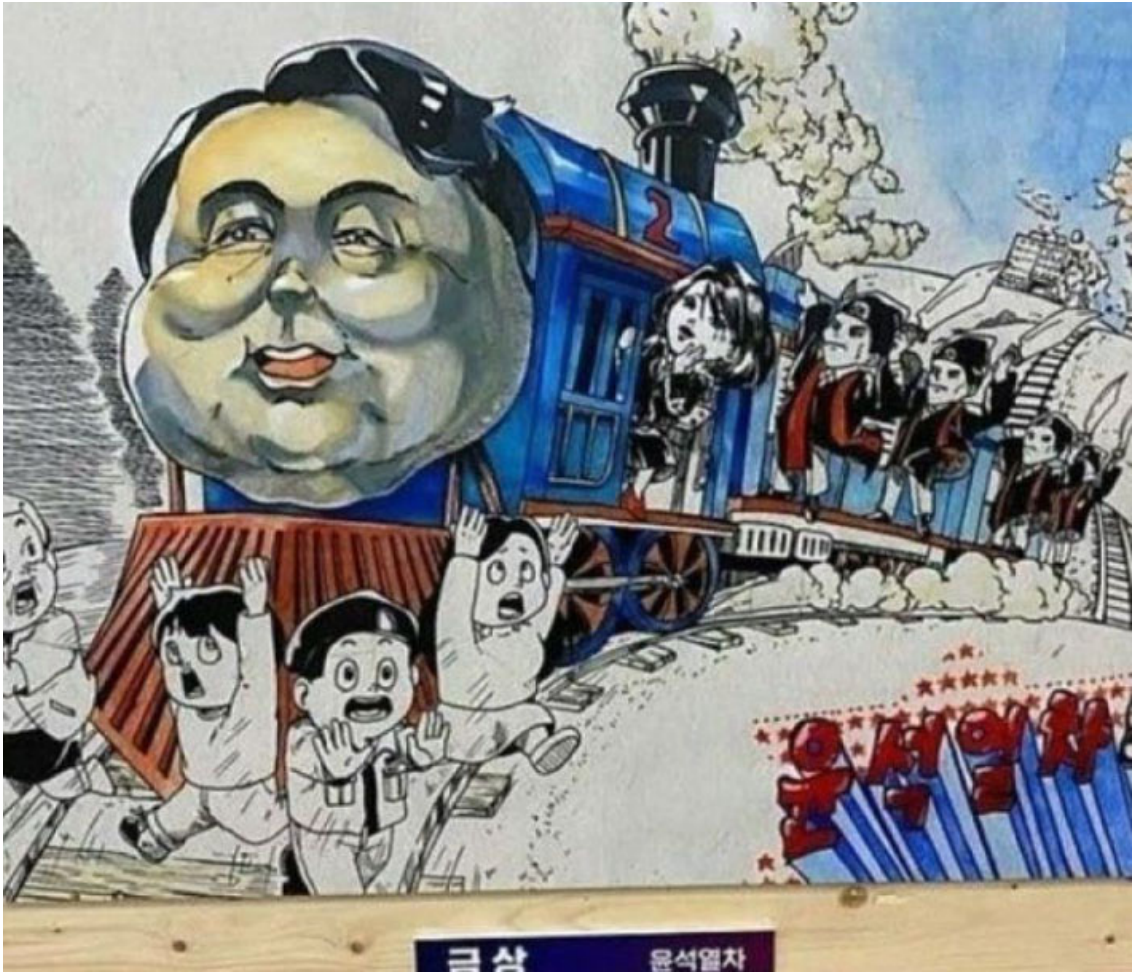
2. 국정 운용 차원에서 ‘좌파 혐오 프레임’을 정책화·제도화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수용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되었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2008년 8월 27일 작성)과 유사한 문화정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계를 ‘좌’(블랙리스트), ‘우’(화이트리스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기관들이 확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및 국가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블랙리스트’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대표적인 책임자였던 유인촌 전 장관을 지명한 것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3. 윤석열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수용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들의 자기 검열 일상화와 주무 부처(문체부)의 직무 유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념 전쟁과 좌파 혐오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정책을 수용하면서 문체부는 물론 행정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 사회 전체적으로 자기 검열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풍자 카툰-윤석열차> 검열 사건(문체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단체)> 지원 배제 사건(서울시), <인천여성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사건(인천시), <호명 呼名 5.18 거리 미술전> 후원 명칭 취소 사건(광주시),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행정안전부), <김건희 풍자 작품> <2022 책 읽는 대전 북콘서트> 좌파 서적·작가 배제 사건(대전시), 서울아트책보고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서울시), <김건희 여사 풍자시> 전시 배제 사건(춘천시), 성평등 전주 <페미니즘 예술제> 검열 사건(행정안전부, 전주시), <우리말로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9번 - 자유의 송가> 공연 팸플릿 사전 검열 사건(예술의전당), <제13회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 선정 도서 배제 사건(경북 경산시) 등의 사례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행정기관들의 문화·예

술 검열(자기 검열)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검열 "윤석열 총장 얼굴의 기차를 묘사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사진출처 =화면캡처)

4.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구조와 검열 체계 연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다시 부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조를 따른 중요한 정책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검열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준은 “정치 편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배제·통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조사, 감사, 예산삭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나 관료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와 언론의 관심과 지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찰이 <민주주의를 지켜라> 문화제 참가 예술가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2023. 06.09) 경찰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불법집회라고 경고.(사진출처= YTN 캡처)



<2023 서울국제도서전> 행사를 관람한 시인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2023. 06.14)(사진출처=블랙리스트 이후)

III. Censorship of art and culture

Post Blacklist

After assuming office on June 12, 2022, President Yoon Suk Yeol held meetings with prominent figures from the film industry, such as actor Kang Ho Song and film director Park Chan-wook, both of whom had been included in the 'Blacklist' created during the administration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 Hye, aimed at censoring, discriminating against, and excluding left-wing artists from receiving subsidies. President Yoon officially pledged that his government would adhere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prevent the resurgence of such blacklists. However, the Yoo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censor artists and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A notable example is the cartoon 'A Train Called Yoon Suk Yeol,' which parodies his brash behavior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was warn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22. The Yoon administration fundamentally rejects the judicial deci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the Blacklist and hold accountable those involved. To shed light on the anti-democratic behaviors of the Yoon government, we aim to outline the issues surrounding its censorship of culture and arts.

1. Reinforcement of the Yoon government's conservative ideological policy and

escalation of political censorship in culture and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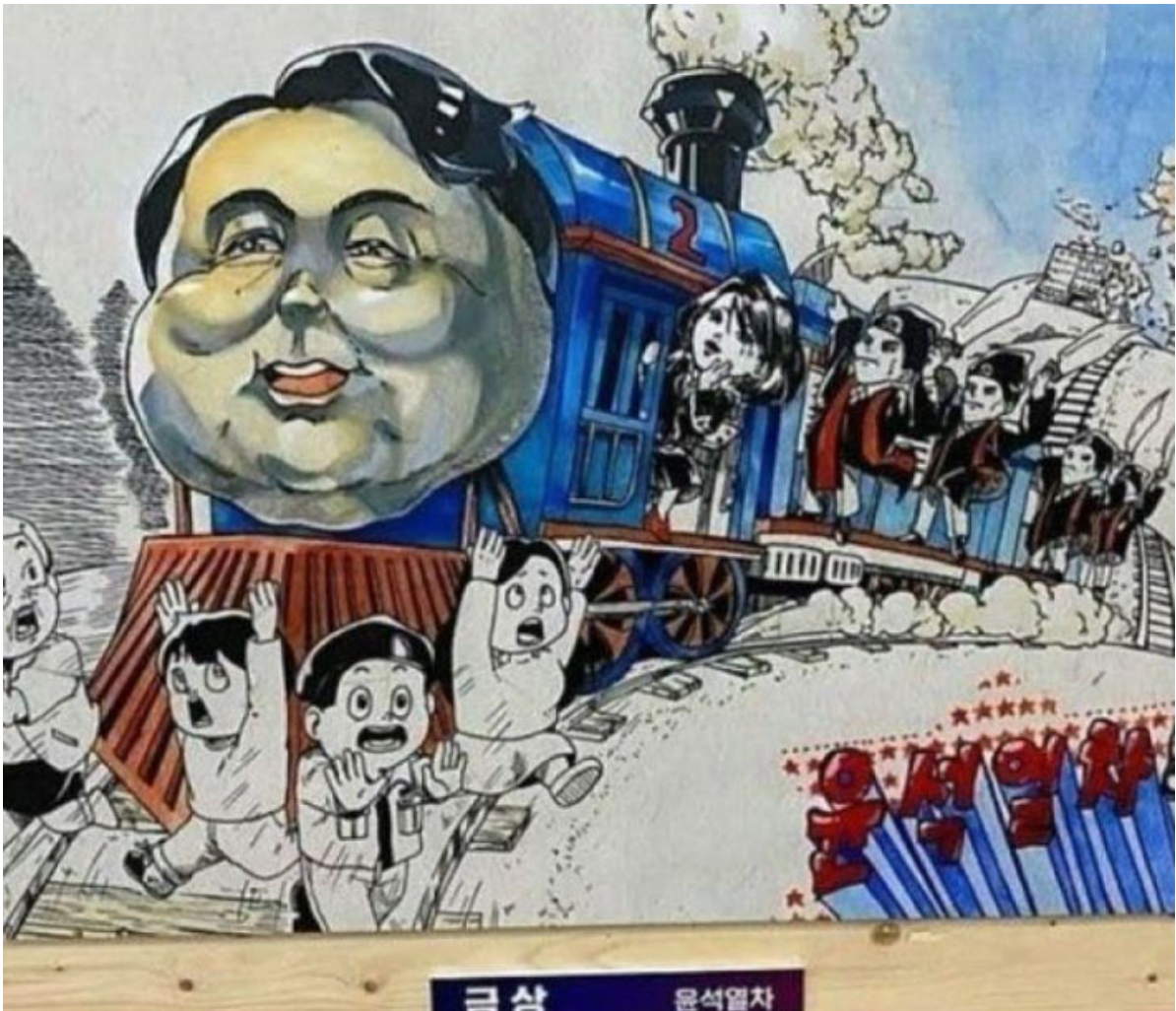
President Yoon has frequently voiced conservative ideological messages in public. During the Liberation Day speech, he stated, "Communist totalitarian forces have consistently disguised themselves as advocates of democracy or progressivism, as human rights defenders, engaging in false propaganda and despicable, reckless conspiracies." Similarly, on September 1, 2023,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he asserted that "Communist totalitarian forces are inciting anti-Japanese sentiment." He indiscriminately disseminates inappropriate ideological messages, fueling political conflicts, hatred, and censorship.

2. Follow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blacklisting and stigmatizing the left-wing artists

The cultural policy of the Yoon government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was the start of the Blacklist. And the government divides the artists into the right and left. Especially, the appointment of Yoo In-chon, the former minister, is a representative and symbolic case. Yoo was one of the main figures responsible for the Blacklist.

3. The normalization of censorship of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on artists, and the neglect of duties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the primary government body responsible

As President Yoon publicly emphasizes the conservative ideology, spreads hatred of the left-wing artists, and follows the main ideology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 Hye administrations blacklisting the artists, censorship of the artists becomes routine not on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cluding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entire society. Since 2022, South Korean society has had around 12 known censored cases.



“Yoonsukyeolcha” art censorship (2022): "A cartoon, titled "Yoonsukyeolcha," depicting a train with the face of President Yoon Suk Yeol, Screenshot from X

4. Integration of subsidy distribution system and censorship system for the culture and art sector

The primary motive behind the creation of the blacklist by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as to identify left-wing artists and favor right-wing artists by manipulating support project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following this exactly. The most common criterion in censorship related to cultural and artistic support is "political bias." In this context, deliberate investigations, audits, budget cuts,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being pursued to minimize support for left-wing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through exclusion and control. Following the national crime of the 'Blacklist,' artists have pushed for the enactment of the 'Artists' Rights Protection Act'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fessional rights of artists. However, under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hich is creating a 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administrative

measures are being used to undermine the law. Cultural and artistic communities in South Korea are striving to halt antidemocratic and regressive policy crimes. Above all, the attention and criticism from a government and media that uphold democracy are crucial.

5. Specific infringements

On June 10, 2023, At the <Protect Democracy> cultural festival event, artists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with performances, poetry readings, and songs. All of a sudden, the police intervened in the event, separated the artists from the event, and stated that the artistic activities were not art but violation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fter the separation. As a result, the artists suffered sexual harassment, contusions, and scratches.



Police violently suppress artists participating in <Protect Democracy> cultural festival (2023. 06.09)
Police warn artists' creative activities are illegal assemblies / Screenshot from YTN

On June 14, 2023, in front of the venue for the <2023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after a press conference to revoke the appointment of Oh Jung-he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blacklist, as a promotional ambassador, artists who had finished the conference and were buying tickets to enter were suddenly subjected to violence by the President's security personnel, who forcibly subdued the artists. The President's security personnel responded that the violence was exercised to prevent terrorism aimed at Mrs. Kim Gun-hee.



A poet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 was dragged by the President's security personnel the venue for the <2023 Seoul International Seoul Book Fair> (2023. 06.14)/ photo by Post BlackList

On February 2, 2024, the incident wher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anceled the hosting of the “Seoul Disabled People Rights Film Festiva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isability Welfare Policy Division announced on January 2, 2024, that there were no selected organizations for the “Seoul Disabled People Rights Film Festival” among the “2024 Support Projects for Activities and Even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Organizations in Seoul. “Seoul Disabled People Rights Film Festival(organization)” is the only screening candidate that passed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and has a history of being selected as an auxiliary operator of the Disabled Human Rights Film Festival for four years from 2020 to 2023. The “Seoul Disabled People Rights Film Festival(organization)” filed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garding the reasons for being excluded.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fused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saying that the reason for the group's elimination was confidential due to “obstruction of fair business performance, etc.” and in effect canceled the holding of the “Seoul Disabled People Rights Film Festival.” In addi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kept the specific screening criteria and list of judges confidential in local government support projects that must be promoted fairly and transparently.

IV.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오픈넷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 검열과 차단

윤석열 정부는 공영·등록 언론에 대한 제재 외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심의 기준도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한 정보, ‘사회적 혼란 야기’, ‘과도한 욕설 사용’ 등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임명하고, 관행상 정부·여당 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광범위한 검열 권한과 맞물려 인터넷상 일반 시민의 정부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데 남용될 우려가 높다.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의 전위대가 되어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이 되고 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질서 위반(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와 명예훼손성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임을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해당 콘텐츠는 작년 11월에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약 45초 분량의 숏츠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만든 영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등을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풍자 영상에 대해 삭제를 결정했다. (사진=화면캡처)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밝히고 있고, 평균적 이해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내용상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다. 또,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이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작년에 게재된 이 동영상에 대해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며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혹은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 표현물을 공론장에서 없애기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자행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이 경찰이고, 대통령실이 이 동영상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후, 경찰이 이 동영상 제작자를 색출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점이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사회질서 위반’, ‘명예훼손’을 빌미로 금지하거나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행해질 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는 곧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이러한 형사적 탄압을 각오하라는 위협, 엄포와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이 바로 공안 국가의 모습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쫓으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지각체크’ 유튜브 채널 영상도 ‘국가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의결을 내렸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조합단체인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북한 노동자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의 전국노동자대회 연대사, 북한 여성들이 나와 영어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는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이 콘텐츠들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보기 어려움에도, 반정부적 내용이나 북한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심의,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반민주적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IV. Infringement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ensorship, and Blocking

Open Net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continues to censor and block internet content tha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of ordinary citizens, in addition to sanctions against public-owned and registered media.

In Korea,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SC') has the authority to censor internet content, and its standards for review are very ambiguous and broad, covering not only illegal information but also 'harmful' information, 'social chaos', and 'excessive use of profanity', which is controversial. The nine members of the KCSC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by convention, it is structured so tha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ppointees occupy more than half of the positions. This structure, coupled with broad censorship powers, raises high concerns that it may be abused to censor dissident expressions of ordinary citizens on the internet and to control public opinion.

Under the current Yoon government, the KCSC has materialized these concerns by becoming the

vanguard of the government's 'fake news' response, and thereby becoming the main actor in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The KCSC declared the creation of a 'rapid review system for fake news' to quickly review information causing 'violation of social order (social chaos)' and defamation. Recently, it decided to block a video content mocking President Yoon Suk Yeol condemning it as 'information causing social chaos.'



a short video titled "A virtual confession speech by President Yoon,"

The content in question is a short video titled "A virtual confession speech by President Yoon," which was posted on TikTok in November last year, editing clips of President Yoon Suk Yeol's speech videos. The video contains President Yoon Suk Yeol saying, "I, Yoon Suk Yeol, have been enforcing laws that torment the people. The incompetent and corrupt Yoon Suk Yeol government has indulged in privilege, cheating, injustice, and corruption," "In my Yoon Suk Yeol's dictionary, there's political revenge but no livelihood of people," among others.

Being marked as fictitious and unlikely to be believed by anyone with average understanding as an actual statement by President Yoon Suk Yeol, it represents a satirical expression. Furthermore, it is an expression containing critical expressions protesting against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which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in a democratic society.

Nevertheless, the KCSC conducted an 'emergency meeting' on this video posted last year, which could only mean that they wanted to protect the president's feelings or eliminate anti-government expressions from the public discourse before the election, engaging in unconstitutional and anti-democratic censorship tha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A bigger problem is that it is the police that requested KCSC's deletion of the video, and that, after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a tough stance on this video, the police carried out a 'search and seizure' to track down the video creator, accusing them of 'defamation,' among other charges.

Attempts to prohibit or criminally manage critical expressions against the highest national authority, the president, under the pretext of 'violation of social order' or 'defamation,' are severe anti-democratic acts that would only be seen in dictatorial states. This serves as a threat and bluff that anyone expressing criticism against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should expect criminal repression, essentially the characteristics of a police state.

Moreover, a YouTube channel titled "Yoon Suk Yeol President's Late Commute Check," criticizing the president's frequent lateness on his way to work, was decided to be blocked for 'national security' and 'leaking information on national secrets.'

Videos posted on the website of Korea's representative labor union organiza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featuring a solidarity message from the North Korean workers' organization (Chosun Federation of All Trade Unions) in celebration of the National Workers' Action Day and a YouTube channel introducing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in English, were block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Despite lacking 'active, aggressive expressions endangering the nation's existence, safety, and free democratic basic order,' these contents were blocked for "containing anti-government content" or "glorifying and propagating North Korea" in a politicized review.

Thus, the internet censorship by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nfringes on th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seriously regressing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this anti-democratic internet censorship.

V. 공공정보 접근·알 권리 침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필수 전제인 알 권리의 퇴행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의 지난 정권들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은 정보공개를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 대통령실 및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 심화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실 및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심화되었다. 정부의 비밀주의 강화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 명단과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뉴스타파 등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통령실 공무원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및 조직도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정부는 직원의 업무 배치가 국가 안보정보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지만 2023년 9월 6일, 대통령실이 항소하면서 아직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실의 역할 및 직무를 서술한 내부규정과 지침마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유례없는 인재로 기록된 2023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사회·재난 안전 분야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대해 ‘국가안보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전문을 비공개 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무엇인지 밝히는 최소한의 설명책임 조차 회피한 것이며,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비리의혹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던 공공정보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실적이 부실한 특정 건설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조달청 공공계약 검색 서비스를 중단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거의 모든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다.(사진=YTN 화면캡처)

한편 지난 2023년 4월, 기소의 권한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의 특수활동비(기밀수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3년간의 쟁송 끝에 대법원의 공개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해당 소송과정에서 검찰은 수천쪽 이상의 예산 집행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정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할 시점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은 직접 예산 집행에 대한 대면 결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들은 집행처와 주소, 사용시각이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채로 공개되었다. 충격적이게도,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또 다시 비공개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권력의 비밀주의와 탄압이 특히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송 및 통신사의 운영 구조를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회의 개최 5분 전에 쫓아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탐사보도를 지속해온 언론을 특정해 공개회의를 방청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해당 회의는 통신사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감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등록된 ‘출입 매체’로 방청 자격을 제한했고, 앞으로도 위원장의 재량으로 방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방청권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언론 생태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3. 정부여당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권력기관의 비밀주의와 비공개 관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정보공개법」(FOIA)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86)은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관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를 훼손

할 위험이 매우 크다.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의 투쟁과 합의를 거치며 확대해 온 정보 접근권과 공공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현저하게 퇴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퇴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억압하는 정부 권력의 비밀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V. Infringement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1. Regression of the Right to Know, a Fundamental Premise for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or opinions is predicated on the freedom of formation, which in turn relies on su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Therefore, not only past administrations in Korea but also governments of countries that hold democracy as their core principle has strived to more broadly and efficiently conduct information disclosure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trust across society.

2. Secrecy, and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ajor power institutions

However, since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came into power, secrecy, and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ajor power institutions have intensified.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al secrecy not only hinders and weakens the public's oversight of

power but also infringes on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ocial events, raising significant concerns.

The Presidential Office of Yoon Suk Yeol has refused to disclose basic information such as the list of public employees and the status of sole-source contracts, which all other public institutions have made public. In 2022, various civic groups and media outlets, including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Newstapa, requeste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names, departments, positions, ranks, specific duties, and organizational charts of Presidential Office employees. However, the Office refused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claiming it pertained to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the court ruled in the first instance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he Presidential Office appealed on September 6, 2023, and the information has still not been made public. The Yoon government consistently keeps inter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describing the role and duti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private. Especially noteworthy is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guideline in the field of social and disaster safety by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Office, which was declared a 'national security matter' and kept confidential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Itaewon stampede disaster on October 29, 2023. This failed even the minimum obligation to explain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and manual for “social disasters”, severely infringing on the victims and the public'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dditionally, whenever there is negative public opinion and suspicions about the president's corruption, public information that anyone could access on public institution websites is either turned private or deleted. For example, soon after Yoon Suk Yeol took office when he pushed for the relocation of his office, a controversy arose over inappropriate sole-source contracts with a specific construction company with poor performance records. In respons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lted its entire public contract search service and subsequently made almost all contractual contents of the Presidential Office private.

In April 2023, after three years of litigation, a lawsuit filed by civic groups for the disclosure of the budget usage details of the prosecutors' special activities (so-called “confidential investigations”),

which has exercised tremendous power in Korean society, concluded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favor of disclosure. During the litigation, the prosecution had submitted written statements to the court containing false claims that the information did not exi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ousands of pages of budget execution documents. Coincidentally, the Prosecutor General at the time the false claims of 'non-existence' began was Yoon Suk Yeol himself, who had directly handled budget execution approvals. Moreover, when the spending records of th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used during Yoon Suk Yeol's term as Prosecutor General, the place, address, and time of the spending were damaged and unidentifiable. Shockingly, despite the Supreme Court's disclosure ruling, the prosecution recently rejected a disclosure request on the special activity budget details again.



In April 2023, after three years of litigation, a lawsuit filed by civic groups for the disclosure of the budget usage details of the prosecutors' special activities, which has exercised tremendous power in Korean society, concluded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favor of disclosure.

What is most concerning, the secrecy and oppression of government power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media sector, which should act as the eyes and ears of the citizen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decides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Kore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has direct regulatory authority, expelled a Newstapa reporting team from the meeting hall 5 minutes before the start of a full meeting on November 29, 2023. Although anyone could atte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meeting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the government specifically excluded that media entity, which has been critical of the government through investigative reporting. The meeting was to discuss changing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broadcasting company YTN to a private compan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ed, "We limited the qualification for attending the meeting to 'registered media' because we are dealing with sensitive issues, and we will decide on attendance at the chairman's discretion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attitude of limiting the right to attend committee meetings depending on the issue or media will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media ecosystem and the public'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3. Attempts to deteriorat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Despite the increasing overt secrecy and non-disclosure practices of power institutions, attempts to deteriorat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re happening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by the ruling party. On January 15, 2024, a revision to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Bill Number: 2126286) proposed by Representative Park Sung-min of the People Power Party aims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resources due to the misuse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by prohibiting "unjust or excessively demanding requests by the requester," allowing suc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to be finally disposed of by the agency itself. However, such revision completely contradicts the purpos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is to enha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operations, as it allows administrative agencies to arbitrarily limit citizens' basic right to know, posing a significant risk to democracy.

As of 2024,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witnessing a significant regression in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public information, which Korean society has expanded through decades of struggle and consensus.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s this regression and calls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to resist the government's secrecy that suppresses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Revealing the reality of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